

'권역응급의료센터' 44→60곳 확대... 내달부터 평가

복지부, 재지정 계획 발표
지역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도
지역별 이용률등 고려해 추가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을 위해 지난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연기했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재지정을 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44곳인 권역센터는 최대 6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대 권역 단위에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오는 5월부터 방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작성성 등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3년(2026년 11월1일~2029년 10월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매년 평가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2026년 기준 3000만 원~6억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는다.
이종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각 응급의료기관의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식 금지

정부가 공공방 위기가 불가한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식 금지 조치를 시행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장에 폴리메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 중간재가 진열돼 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이날 0시를 기해 예열렌, 프로필렌, 부티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치료해준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벌금형

법 "피해대원 처벌 불원동 고려" 대원 3명 정강이 차고 얼굴 때려

부상을 치료해준 소방대원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질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법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4월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하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안전점검 예고" 겁박해 대금 요구 공공기관 사칭 신종 노쇼사기 기승

속초 모델업주 400만원 피해
정관명의 인증서 위조해 범행

강원지역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해 불품 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속초 속초에서 소방서 안전관리과장을 사칭한 사기범이 모델 업주에게 접근해 약 40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사기범은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점검을 받기로 정근해 '질식 소화포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된다'고 업주를 압박했다.
이어 특정 업체에서 불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부 보조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입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위조해 보내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은 유사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위조해 보내는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업체를 통해 불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계좌로 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나 점검 예고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사기 범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문인희 기자 mmh@siminilbo.co.kr

당근마켓서 산 후 몰다 사고낸 고교생

신분증등 확인절차 없이 구매
4명 번갈아가며 무면허 운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고등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리며 잡힌 사안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부산 검경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7일 오전 3시30분경 금정구 두구동에서 달린던 예수구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인 A군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따르면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이날 해당 차량을 번갈아가며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이전에도 파주과

부산=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작년 우회전 교통사고 1.4만건... 75명 사망

사망자 54.8% 65세이상 노인
56%는 보행자·사망 위험 높아
20일부터 일시정지 위반 단속

경찰은 오는 20일~6월19일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인화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다.
이중 절반이 넘는 28명(66.7%)은 승용차(17명)나 화물차(11명)에, 9명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교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우회전 사고 위험도도 높았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23명(54.8%)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정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정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벌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이영준 기자 yjj@siminilbo.co.kr

'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징역 6개월

"도주할 우려 있다" 법정구속
업무방해·외설 영상 유포도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버스, 지하철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투버 조니 소말리(본명 랄피 칼리드 이스마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법위반상 허위영상물 유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

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류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법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종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소말리는 이날 검은 양복에 검은 모자, 선글라스 착용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재킷 가슴에는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달았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교량 동판 흠쳐 고물상에 판매 2명 구속... 전국서 400개 절도

전국 각지를 돌며 교량에 설치된 동판을 흠쳐 판매해 온 3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교량의 동판을 흠쳐 판매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교량에 부착된 교량판과 안내용 동판을 노려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2주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400여개 단편의 동판을 떼어낸 뒤 고물상에 넘겨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전국 22개 시·군에서 이뤄졌으며, 123개 교량에서 교량판 205개, 123개 교량에서 교량 설명판 211개 흠쳐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난당한 동판이 고물상을 거쳐 재판매처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품 전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장물품 매입한 고물상 관계자들에게 대해서도 잠복수색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